

상반된 여야 원내대표 경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진용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내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단일화 성사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 1~2개월 연기론 부상

소장파·중진들 공감... 정의화 등 후보들 반대

당내 갈등과 쇄신 움직임 등을 감안, 오는 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 미루자는 연기론이 당내 소장파는 물론 중진 의원들 일각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3일 “최근의 당내 사정 등을 감안해 개혁입법을 기준 원내지도부가 마무리 짓고, 6~7월에 경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현·당규에 따르면 (경선 연기)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한 그룹이라도, 비중 있는 그룹이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담당한 마음으로 충분히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이라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화, 안상수, 홍우여 의원 등 원내 대표 경선 후보들은 “원칙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경선을 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론에 반발했다. 또 한 의원이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후보들간 경쟁이 본격화 됐다.

민주, 후보 단일화 분위기 고조

내일 경선... 이강래·김부겸·박지원 3파전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이 이날 이강래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중도하차하면서 경선 구도는 주류 측의 김부겸, 비주류의 이강래, 탈(脫)계파를 표방한 박지원 의원 간 3파전으로 정리됐다.

이에 이강래 의원 측은 막판 단일화로 확실히 승기를 잡았으며 반색했다. 단일화를 주선했던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17명)와 친(親)정동

영계 중심의 국민모임(10명) 가운데 두 모임 중복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2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한데다 호남표 상당수까지 더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나머지 두 후보 측은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고 이강래, 이종걸

두 분의 지지기반이 범 비주류라는 틀 내에서 겹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 측은 “단일화 이후 이달표 일부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가능하겠지만 불투명한 단일화는 거부하고 뚜렷하게 걸어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정권 실세도 조사하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연자 게이트’ 수사에서 현 정권의 실세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놈물이냐” “100만불의 일부냐”

■ ‘40만불’ 루 영장청구 여부 주목

실리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계속 바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 수수 사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자대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사안의 종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아들·딸 및 정상운 전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 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박게이트’ 주부길

檢, 징역 3년 구형

박연자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척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주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암선수재)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강운태 민주당 복당 가시화

정세균 대표 “복당 신청하면 적극 검토”



현재 거론되는 복당 대상자는 작년 4·9 총선 때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전감길 광주 광산구 청장, 이석형 함평군수 등이다.

민주당의 복당 추진 배경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의원을 경제하고 당내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복당이 추진되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탈당 후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에서 정동영 의원도 복당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또,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을 통해 정동영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동안 복당이 미뤄져 왔던 인사들을 대거 당내에 복귀시키면서 주류와 비주류로 갈등을 빚어온 당내 화합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3일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건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집회·시위를 해산할 때도 보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시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영상촬영 등 제3자에게 집회·시위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무원 발언 박시장 사과해야”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13일 “비실비실 놀고먹는 공무원” 발언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의 ‘놀고먹는 공무원 발언’은 3천여 시·공무원을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으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퇴출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지만, 박시장의 발언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 2개월 원성 3회 번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환

• 수강료 15% D/C

주저하지 말고 1년 수강료 96만 원을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률 1위
교수진

경찰학 오 탄

수사 차주운

• 신 경찰 경찰학 개론 저작
• 남·북 경찰학원 강당
• 광주 경찰 학원 전임

• 경찰 경찰학 개론 저작

• 경찰 영어 70% 합격률

• 경찰 경찰학 개론 저작

• 광주 경찰 학원 강당

• 광주 경찰 학원 전임

• 경찰 경찰학 개론 저작

• 경찰 경찰학 개론 저작